회고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유기홍**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유기홍*
전 국회의원,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1. 머리말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을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만큼 민청련의 창립과 발전은 19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성장과 도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이건 청년 세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도정을 걸었던 바, 청년 세대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년운동은 1970년대 유신치하에서,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중

* 유기홍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필자는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반성," 『민주화의 길』 제15호와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 『한국사 20』(한길사) 그리고 『한청협 10년사』(한청협 전국동지회)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항쟁 속에서,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 1990년대 통일운동의 발전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자기 헌신으로 역사를 개척해 왔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1983년에 민청련이 창립될 수 있다. 그리고 1989년에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로, 1992년에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로 발전하면서 1980년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갔다.

이 글은 민청련 운동이 1980년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반적 특징과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민청련 운동의 흐름을 서술하는 기본적인 인식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3절에서는 민청련 창립 이전의 한국 청년운동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고, 민청련 결성 준비기의 정세와 주체 내부의 논의를 요약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1983년 9월 민청련의 창립으로부터 1992년 11월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까지 약 10년의 역사를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민청련의 창립 준비부터 직접 참여하고, 발전적 해소를 결의한 민청련의 마지막 의장이자, 민청련을 계승한 한청협 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민청련 10년의 역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오랜 수배와 투옥의 고통마저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민청련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의무로 받아들여져서 감히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청련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청련 창립일인 1983년 9월 30일 이전, 즉 민청련 결성을 위한 준비 노력과 더 거슬러 올라가 민청련 이전 청년운동의 흐름은 별도로 '민청련 창립의 전사(前史)'의 장(章)에서 기술할 것이다.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 이후 청년운동의 전국적 발전[1]은 이번 작업의 여러 한계로 인해 상술하지 못하고, 네

1)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1989년)와 한국민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1992년) 그리고 한국청년

번째 시기에서 부분적으로 살펴 볼 것임을 밝혀 둔다.

창립기: 두꺼비의 탄생(1983년 9월~1985년 8월)

이 시기는 민청련이 당시 정권의 탄압을 헤치고 결성되어, 반합법 투쟁 공간을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의 근거지를 구축해 나간 시기이다. 그러나 1985년 8월 민청련은 탄압의 칼끝에 놓이게 된다.

탄압기: 시련을 넘어(~1987년 6월)

민청련 창립 이후 노동 · 문화 등 각 부문운동 조직이 결성되고, 지역운동 역시 활성화되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등 국민운동전선이 형성되자 전두환 정권이 공안탄압을 본격화한 시기이다. 아울러 개헌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쟁점이 되면서 점차 대중투쟁이 고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청년운동의 대중화 시기: 대중의 바다 속으로(~1989년)

6월항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 농민회 · 교직원노조 등 대중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청년운동 역시 급격한 대중적 확산을 경험하게 된다. 민청련은 이러한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지역 지부를 건설하는 한편, 노동운동 등 대중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전국 청년 단일조직 건설과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1992년 11월)

1989년의 전청대협 결성 이후 민청련은 청년운동의 전국화 · 대중화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며, 이른바 "전국 청년 단일조직" 건설에 매

연맹 준비위원회(1998) 등이 전국적 청년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각 지역(광역시도별 및 시군구) 단위로 청년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진하게 된다. 마침내 1992년 2월 한청협이 결성되고, 민청련은 발전적 해소를 결의하게 된다.

2.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성격과 특징[2)]

19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다.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재야운동 등 주로 반독재 투쟁의 성격을 갖던 우리 운동이 1980년대 이후 몇 가지 확실한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민청련 운동은 이러한 토양 속에서 개화할 수 있었고, 민청련은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변혁운동으로서의 총체성 획득

먼저 살펴볼 점은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이 정치사상적인 면에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한 총체성을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4월혁명 이후, 1960년대는 물론 1970년대는 이른바 유신체제하의 운동에서는 '민주회복' 혹은 '민주수호'라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물론 4월혁명 시기의 통일운동이나 19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과 같은 반외세투쟁이나 통일운동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일시적·부분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따름이다. 1980년대 들어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반외세자주화투쟁의

2)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유기홍(1994, 61-94)을 참조.

과제가 더욱 분명해지고, 1986년 이후 조국통일운동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3대 과제가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70년대식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주 · 민주 · 통일의 과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민족민주운동'이라는 개념과 운동의 주체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민중민주운동'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된 것도 1980년대 운동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발전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청련은 창립 초기부터 3민(민족 · 민주 · 민중)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민족적 과제와 민중 주체성을 분명히 했고, 이른바 C-N-P논쟁[3] 등을 통해 변혁이론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 기층대중운동의 성장

민족민주운동에서 기층대중운동의 주도성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것도 1980년대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대의 기층대중운동이 다분히 추상적 · 관념적인 민중 개념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1980년대에는 노동자 · 농민 · 도시빈민 등 보다 명확한 계급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아울러 이들 생산대중의 운동이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 요구 등 경제투쟁의 범위를 넘어 정치투쟁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 · 농민 · 빈민 등 기층대중운동이 급속히 발전했고, 그 조직적 성과로 전국적 대중조직이 속속 건설되었다. 노동운동의 경우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지역별 · 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가 결성되었고, 이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1990. 1)로 이어졌다. 또 기존의

---

3) 'C-N-P논쟁'은 민청련 내부에서 시작되어 전체 민족민주운동으로 확산된 변혁운동 노선에 관한 논쟁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기홍(1986, 39-41)을 참조.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의 통합을 뼈대로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고, 이는 다시 '전국농민협회'와 통합하여 전국농민의 단일한 조직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1990. 2)'의 건설로 발전했다. 한편 빈민운동도 1989년 11월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운동, 각급 민주동문회 운동과 같이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조직화가 진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민청련은 창립 초기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층대중운동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1986년 이후에는 직접 대중운동 현장에 진출을 모색했다.

3) 통일전선운동의 진전[4)]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넓어짐에 따라 각계각층, 전국 각 지역의 조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반합법 공개 정치투쟁조직과 이에 준하는 각급 대중조직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전선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의 패배와 좌절을 딛고 1983년 민청련이 창립된 이후, 이른바 반합법 정치투쟁조직이 속속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가 결성되었고, 1985년 3월에는 이 양자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출범했다.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는 민족민주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제도권 야당인 통일민주당까지 포함한 "범민주 연합전선"인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지역운동의 자주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적 규모의 통합성을 획득하게 된 것도 중요한 발전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운동은 각 부문 · 지역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전국적 · 전부문적 공동투쟁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6월항쟁

---

4)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통일전선운동에 대해서는 이재화(1989, 136-154)를 참조.

을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1989년 1월에는 급성장한 각계각층의 조직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통일전선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건설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통일전선운동이 주요 국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는 대통령선거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분열과 패배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계기에 민족민주운동이 강력한 자기중심을 가지면서 일치된 행동을 조직해낼 정도의 통일·단결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4) 투쟁형태상의 발전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투쟁형태 상의 발전이다. 1960~70년대의 운동에서는 선구적 지식인 및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문제제기식 투쟁과 특정 정치적 계기 혹은 생존권문제에 따른 일회성 투쟁이 주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민족민주운동이 각계각층에 걸쳐 지속적인 투쟁의 근거지를 만들어내면서 반외세투쟁과 반독재투쟁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6월항쟁을 전후해서는 투쟁이 특정 계기에 국한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계절성까지도 극복함으로써,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각 부문의 투쟁이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투쟁이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60~70년대 운동의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에 투쟁이 집중되고, 지방에서의 투쟁은 대개 고립 분산적이었다. 1964~65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1969년의 3선개헌 반대투쟁뿐만 아니라, 1979년의 부마항쟁과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까지도 투쟁양상이 국지적 격렬성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6월항쟁은 가히 전국의 전 계급계층을 망라하는 규모였다. 이러한 '전국 동시다발대중투쟁'은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의 물리적 탄압

을 분산시킴으로써, 광주민중항쟁에서와 같은 국지성을 극복하여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대중선전 방식이 개발되어 급속한 진전을 보인 것도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이뤄낸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1960~70년대에 많이 쓰였던 전단류의 선전매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 ·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특성에 따른 신문 등 지속적인 매체가 일반화되었다. 이외에도 스티커 · 벽보 등과 같은 전시매체, 녹음테이프 · 비디오를 이용한 시청각매체도 새로이 개발됨으로써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제도언론의 흑색선전을 뚫고 자신의 주장을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청련은 『민주화의 길』과 『민중신문』의 발간, 2 · 12 총선투쟁 시기의 스티커 및 벽보 부착, 1987년 대통령선거 시기의 광주학살 사진자료집 등을 통해 투쟁양식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3. 민청련 창립의 전사(前史)

1) 한국청년운동의 개괄적 흐름

세계사적으로 진보적 청년운동은 19세기 말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그 일부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사적 반파시즘 공동전선 형성과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속에서 청년운동의 지위와 역할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단지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변혁운동의 매개자,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적극화되기 시작한 것이다(유기홍 엮음 2000, 20).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나 혁명운동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청년운동 출신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청년운동의 선도

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근대적 교육제도가 발전하고 학생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청년운동은 보다 탄탄한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된다.

한국도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적 청년운동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시작되었다. 3 · 1운동 이후 일제의 유화정책 속에서 각종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전국 약 220개 청년단체의 연합체로서 나름의 대중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해방을 맞으면서 청년운동은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 속에서 급속한 대중적 확산을 이루며 선봉적 역할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어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핵심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통치 정국을 거치며 좌우 청년운동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한국전쟁의 발발을 통해 한반도에는 분단체제가 고착되었으며, 남쪽의 대부분의 민주세력과 청년운동은 단절하게 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며 청년운동은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이는 마치 거친 들판에서 민들레 홀씨가 떡잎을 피워내듯이, 청년운동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화와 근대적 교육기관의 확충에 따라 학생운동이 성장하게 되고, 4월혁명을 거치면서 청년운동이 다시금 싹을 틔운 것이다. 1970년대 들어 1971년 '민주수호청년협의회', 1974년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을 거쳐 1975년 긴급조치 제9호 발동 이후 1978년의 '민주청년협의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청년운동은 반유신독재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특히 '민주청년협의회'는 유신정권의 말기인 1978년에 결성(초대 회장 정문화)되어 '동일방직사건', 'YH사건' 등에 깊숙이 개입하며 유신정권에 대항했고, 10 · 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언을 고한 이후 이른바 'YWCA위장결혼사건'을 주도하며 신군부의 등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요컨대 유신말기 국민들의 저항을 가장 선도적으로 대변하며 운동의 조직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년운동은 학생운동 출신의 지식청년 중심의 운동에 머물러, 대중적 기반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다. 청년운동이 본격적인 조직성과 대중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민청련의 결성과 함께였다.

2) 민청련 창립 시기의 객관적 정세

① 80년대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의 변화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출범과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1974~75년, 스태그플레이션의 세계적 전개와 석유 위기 등과 함께 그 구조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위기 속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국인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경기후퇴, 광공업 생산의 저하, 실업률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0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통해 레이건 정부가 출범했다. 레이건 정부는 금융긴축정책과 감세의 결합으로 비인플레적 투자확대를 유발하고, 인플레를 억제하여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며, 군비확장으로 대소(對蘇) 군사력 우위를 회복하여 미국의 위신을 되찾겠다는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민의 전체적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게 된다.

레이건 정부는 대소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극동 지역에 두 가지의 전략적 임무를 부여한다. 첫째, 한반도 및 극동지역을 페르시아만 유사시 소련의 개입을 저지 내지 약화시키는 속죄양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둘째, 극동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이 급장함에 따라 소련 및 소련의 동맹국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 미국 대소전략의 최전선으로서 이를 무력화하고 저지하는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한 · 미 · 일 삼각군사동맹 및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을 통한 반소 아시아전선의 구축을 강력히 추구하기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더욱 많은 경제잉여를 확보하고자 경제적 침탈을 강화해간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바는, 첫째, 미국의 신 냉전체제 즉 대소 강격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할 것, 둘째 일본과의 국민적 감정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 · 미 · 일 삼각군사동맹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할 것, 셋째, 미 · 중 동맹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남 · 북한 관계가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협조할 것, 넷째 미국독점자본의 한국 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이러한 요구는 그 자체로서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 요구가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에서의 친미정권의 존속이었다. 해방 이후 미국은 한국의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등 모든 면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결국 "어떤 독재든 반미 내지는 공산독재보다는 낫다"는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정통성이나 지지 기반이 약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한반도 내에서 손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미국과 전두환 독재체제의 새로운 동반관계를 선택했다.

②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체제정비와 공고화

미국의 지원으로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은 전두환 정권은 체제 내에서의 세력 재편 및 정치권의 재편과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군사독재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회의를 통한 각종 규제법령의 제정 및 개악을 기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그 사례들이다.

다음으로는 정승화 등으로 대표되는 군부 내 온건세력의 숙청과 김복동 등 반대파의 거세, 군 장교들이 고위 행정 관료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마련 등을 통해 군부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정화 조치 등에 의

한 행정 관료의 숙정을 통해 자파세력을 심어 관료통치체제를 재편하는 한편, 언론사 통폐합, 기자의 대량해고, 언론인에 대한 매수를 통한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

1980년 5월 이후 1981년 말까지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독재체제의 공고화 작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적 모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강경조치에 의해 마련된 미봉책은 그 효과가 1년을 넘지 못했다. 1982년에 접어들면서 모든 부문에서 모순이 급격히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새로운 통치방식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화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지원에 의한 통치체제의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각 사회세력에 대해 약간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통해 대규모의 물리적 저항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대한 것과 달리, 1980년 이후 숨죽이고 있던 각 사회세력이 학생운동을 필두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종교운동, 문화운동 등 각 영역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투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폭압통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유화국면'이 도래하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③ 민주화운동 세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전열 정비

광주민중항쟁의 좌절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에게 심각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은 첫째,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모순의 본질과 성격, 둘째로 이러한 모순 해결의 주체, 셋째로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이어졌다. 1981년과 1982년에 등장한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등 이른바 '팸플릿논쟁'은 이러한 모색의 일단을 보여준다.[5] 이후 민

5) 이른바 '예비-전망 논쟁'에 대해서는 편집부(1988, 29-34) 참조.

청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른바 C-N-P논쟁은 이에 관한 고민이 더욱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좌절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는 무엇보다도 민족문제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970년대의 모든 대중운동은 군부독재 타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미국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단히 낮았다. 이러한 장애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대규모로 전개된 대중투쟁, 즉 광주민중항쟁이었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미국이 광주시민을 구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유언비어가 널리 유포될 정도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군의 증원투입 허용으로 대답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 탐구와 함께 실천적 투쟁을 통해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8월 8일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의 "한국민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으며 한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과 1981년도 미국산 쌀 도입과정에서의 뇌물 수수사건,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 알래스카 산 연어 통조림 수출 기도사건 등의 폭로, 1982년 2월 주한 미국 대사 워커의 한국 민주세력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개인적 문제나 개별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총체적 인식이 민주화운동 세력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운동세력의 정치적 입장 및 투쟁방법을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 12월 13~14일 미 국방장관 브라운의 방한에 즈음한 12월 9일 광주미문화원 방화투쟁이 일어났다.[6] 이 사건은 초기에는 일반 전기 화재로 발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1980년 말에는 학생운동 내에서도 반미선동이 등장했다.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에 배포된 유인물에 "미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

6) 이 내용은 "광주미문화원 방화 용의자로 수배 16개월 정순철 영광서 검거,"『경향신문』(1982/03/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82년도에 들어서는 종교계 인사들도 공개석상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반미선동의 흐름은 1982년 3월 18일 문부식 등에 의한 '부산미문화원 방화투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은 민중민주화운동 세력을 용공 · 좌경으로 매도하면서 역선전을 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권력의 부당성 폭로하고,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반미투쟁이 민족민주운동의 주요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1982년 4월 22일 강원대생들이 반미시위를 주도하여 "부산 동지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 "양키 고 홈"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반미감정 확산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1982년 7월 6일, 「뉴욕 타임스」지는 사설을 통해 "한 · 미 양 국민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씨를 양육시킬 것이라는 희망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악의 보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는 글을 실었다.

이후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기존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반민족적 현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계속되는 한 반미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계속 선전했다. 그러나 당시 민족민주운동은 주공격 대상을 군부독재 세력에 두고, 군부독재를 지원하는 미국 내 보수 세력을 분리 ·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4. 민청련, 그 투쟁과 고난의 역사

1) 창립기: 두꺼비의 탄생(1983. 9.~1985. 8.)

① 시기 개관

1982년 여름, 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청년단체의 결성을 논의했다. 광주민중항쟁을 포함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민주청년협의회 등 1970년대 청년운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 운동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선도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민족민주운동을 앞서 이끌어 나갈 청년조직의 결성에 합의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3년 9월 30일 성북구 돈암동 소재 가톨릭 상지회관에서 역사적인 민청련 창립을 하게 되었다.

민청련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이 반독재 운동에만 치우쳐 미국 등 외세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한 자각이 낮았다는 점을 반성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을 표방했다. 이는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보는 시야가 보다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창립 선언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울러 조직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몇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에 의거한다는 '대중노선의 원칙'과 강한 조직적 규율에 따라 투쟁한다는 '조직운동노선'을 2대 원칙으로 표방했다.

민청련은 상징물로 두꺼비를 정했다. 두꺼비는 뱀에게 잡아먹힘으로써 뱀을 죽이고, 또 죽은 뱀의 살을 양분으로 이용하여 더 많은 새끼 두꺼비들을 길러낸다. 또한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구해내는 우리의 두꺼비 신화가 보여주듯이, 두꺼비는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여 싸움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영물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싹을 일찍이 제거하려 하였다. 안

기부가 창립총회 직후 김근태 의장 등 집행부 6인 모두를 연행하여 민청련의 해체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이 각서 쓰기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버텨냄으로써 민청련은 첫 번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탄압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사무실 임대를 방해하고, 현판을 떼어가고, 심지어 건물주와 짜고 밤새 사무실 집기를 길바닥에 끄집어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민청련의 활동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행과 구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종로경찰서에서 민청련 간부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마다 회원들은 하나가 되어 사무실 집기를 다시 6층까지 끌어올리고, 현판을 떼어 간 형사를 절도죄로 고소하며, 간부들이 연행될 때마다 경찰서 앞에 몰려가 항의투쟁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종로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제발 다른 경찰서 관할지역으로 이사 갈 수 없느냐"고 간청할 지경에 이르렀다(유기홍 1986, 26).

민청련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주화의 길』과 대중신문인 『민중신문』을 비롯해 각종 선전물을 발행하여 민중들의 투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두환 정권의 실정을 폭로했다. 또한 레이건 방한 반대투쟁, 전두환 방일 반대투쟁, 서울에서 최초로 시도한 광주영령 추모집회 등을 통해서 폭압통치 아래에서 억눌렸던 투쟁의 불길을 되살려 나갔다.

민청련이 투쟁을 통해 창립함으로써 길이 열리자 '노동자복지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와 같은 부문단체가 결성되고, 전북 · 광주 · 인천 등에서도 민청련의 뒤를 이어 많은 민주단체들이 창립되었다. 민청련은 이 단체들을 한편으로는 "지역운동협의회"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로 결집시킴으로써 이후 민통련 · 전민련과 같은 연합운동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했다.

② 운동의 방향 설정

민청련은 창립 초기의 활동목표로 투쟁성의 회복, 청년 내부역량의 체

계화, 다른 운동세력과의 굳건한 연대,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 운동 방향의 모색과 방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 2-3). 이러한 활동목표 하에서 198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그 구체적 성과를 이루어 나갔다.

우선,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창립총회를 통해 민청련의 출범을 공식화시키는 한편, 임원들의 연행에 대한 지도위원, 종교계 인사들의 항의로 7일 만에 전원이 석방되어 반합법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력 제고였다. 이때까지 많은 학생,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민주화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지만,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공격하는데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11월에 발생한 서울대 황정하 열사의 추락사에 대해서는 E.Y.C. K.S.C.F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회여론화했다. 또 12월 들어 이리와 인천에서 시작된 살인명부(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0일 16개 기독교 및 청년단체 연석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기도회 및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13개 단체가 연합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민주노동운동자 살인명부 문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학생운동 출신을 규합 · 조직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운동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민주화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1983년 당시 민청련은 1980년 이후 패배주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공개정치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운동권에서는 민청련이 1983년 말을 넘기고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1983년 말 소위 자율화조치가 내려져 유화국면이 시작되었고, 민청련의 대응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민청련은 출범 초기부터 일정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대중조직에 대한 입장의 결여였다. 당시 대중운동은 낮은 단계, 즉 일상투쟁의 시도에 머물러 있었고 정치투쟁 수준에 이르지 못하

고 있었다. 민청련 지도부는 아직 미약한 현장 대중운동이 자칫 공개정치투쟁과 연결될 경우 탄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중조직 활동에의 직접 참여는 피하고 대중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을 역할로 삼았다. 이는 6월항쟁 이후에 보이듯이, 대중운동의 폭발적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민청련의 재생산구조에서 학생운동 출신인자의 규합에 집착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폐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운동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민청련의 역할 중 하나가 이른바 'C-N-P 논쟁'으로 명명된 민주변혁논쟁이다. 이는 운동론의 과학적 체계화를 위한 모색으로서 민청련 내에서 시작되어 전체 민족민주운동 내부로 확산되었다. 구속된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한 공소장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서술은 당시 논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 "…… 현재 운동권에는 크게 나누어 씨디알(CDR), 엔디알(NDR), 피디알(PDR) 등 세 가지 지도이념이 있다. 이것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 운동 주체의 설정, 운동방식, 당면과제의 설정 등에 차이가 있으며 씨디알은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군부독재와 민중간의 모순으로 보고 중간계급을 민중에 포함시키며 군부독재에 대해서는 계급적 성격보다 정치적인 독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시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 데모크라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CDR의 주체 가운데는 당연히 민족부르주아, 진보적 지식인, 청년, 학생층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노동계급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CDR에도 미국 등 외세와의 관계설정에 관하여 두 가지 입장이 나뉘는데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서라도 우선 군부독재를 물리쳐야 한다는 CD 기회주의세력과 미국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입장인 CD 급진주의세력 등이 그것이고 민추협과 민중의 구

세대는 전자에, 민통련의 젊은 세대는 후자에 속하고, 후자는 그 근거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유난히 강조한다. 또 NDR을 한국 사회의 모순을 민족적 모순과 파쇼적 모순이 겹쳐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반제반파쇼투쟁으로서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운동의 주체는 외세와 국내 독점자본으로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 · 농민 · 빈민 등 기층 민중 집단으로 설정되는데 노동자 계급이 주도역량이 되고 학생과 급진적 청년층이 선도역량이 된다. 그런데 중소상공업자 등 중간계급은 파쇼와의 싸움에서 세력관계의 변동에 따라 동요하는 세력인데 이들을 민중 편에 끌어들이는 것이 운동의 현실적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 PDR은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보수 세력과 자본 세력만의 대결로 파악하고 모순 해결을 위한 무분별한 공개 정치투쟁으로 역량을 소진하는 것 보다는 민중지원투쟁에 전력하여 민중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운동의 주체 설정에 있어 노동자 · 농민 · 빈민계급만을 중요시하며 중간 계급과의 제휴 연대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또 중간계급과 제휴를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전술적 차원에 머물 뿐 NDR에서처럼 전략적 차원은 아니다."(이상 유기홍 1986, 40)[7]

이 민주변혁논쟁은 이후 사회구성체 논쟁을 촉발했으며, 1986년 이후 민족민주운동 내부의 본격적인 사상논쟁을 예고했다.

③ 실천 활동

창립 초기 존폐의 위협 속에서 항상 긴장해야 했던 민청련은 유화국면을 맞이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침체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을 독려하는 한편 조직 · 선전 · 투쟁에서 선도적 성

7) 기타 C-N-P논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부(1998, 57-65)를 참조.

과를 쌓아 나갔다.

조직역량의 확대와 체계화

1984년 초 유화정책의 일환인 복학 허용 조치에 따라 복학대책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화되어 있던 활동가들의 조직적 결집이 이루어졌다. 민청련은 복학대책위원회 활동의 매개적 역할을 함에 따라, 석방된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대거 민청련으로 흡수되어 조직 확대와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즉 복학투쟁이 마무리되면서 노동현장으로 이전하거나 복학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운동출신 활동가들이 민청련에 대거 가입하여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대표가 거의 망라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1984년 4월에는 민청련 내부에 여성부가 발족됨으로써 여성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실천역량으로 등장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층 민중운동과의 지속적 · 체계적 연대를 맺고 지원하려는 민중운동 지원 부서를 확립했다.

제3차 총회(1984. 10. 20)와 제4차 총회(1985. 3. 23)를 통해 조직은 보다 체계화되어 나간다. 당시 정권의 구조적 탄압의 확대 속에서 운영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국과 집행국으로 실무를 세분했다.

선전매체 개발 등 대중투쟁 양식의 발전

1984년 3월 창간된 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화국면에서 나타난 운동양식에서 가장 특기할 점은 새로운 홍보매체의 개발이었다. 홍보매체들은 운동론의 정립과 활동가 및 대중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의 '유인물'들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운동론을 펴나가기에 부족했다면, 『민주화의 길』은 운동의 방

향제시, 정세 분석, 내부 동질성의 확보, 관제언론에 대한 대항 선전 및 폭로, 지면을 통한 타 운동권과의 교류, 이슈의 선진적 채택을 통해 각 부문 활동가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고, 잠재된 운동대중의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중성 확보라는 과제에 부응하고자 대중신문 형태의 「민중생활소식」을 발간하고, 이를 직접 대량으로 배포했다. 기존 성명서류의 매체가 주로 운동권 내부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대중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매체를 개발한 것이다.

민청련은 대중 집회 등 투쟁양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형을 창출했다. 기존의 대중 집회는 집시법이라는 법적 제약에 눌려 종교권의 기도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민청련은 1984년 이후 창립대회 · 총회 · 추도식 · 강연회 · 가두행진 · 집단농성 등 다양한 집회 양식들을 실현하여 집시법을 내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결집시켰다. 민청련은 이러한 집회를 주도하거나 다른 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두시위는 여전히 학생운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청련 등 사회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대운동의 발전과 선거투쟁

유화국면이 가져다 준 잠재적 운동공간의 확대는 민청련의 창립을 신호탄으로 하여 각 부문별 운동조직의 건설로 이어졌다. '해직교수협의회(1983. 12. 20)', '노동자복지협의회(1984. 3. 10)', '민주언론운동협의회(1984. 12. 19)', '민중문화운동협의회(1984. 4. 14)' 등이 바로 그것이며, 야권 정치인들도 '민주화추진협의회(1984. 6. 14)'를 결성했다.

서울지역에서의 반합법 운동의 정비와 활성화는 곧바로 전국 각 지역에서의 운동체들이 태동하는 데 활력소가 되었다. 이는 각 지방별로 복학대책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결집된 청년운동 역량이 바탕이 되었으며, 그간 부분적으로만 연대가 이루어지던 종교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지역운동 단체

들이 출범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를 필두로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전라남도민주청년운동협의회' 등의 발족을 통한 지역 운동의 새로운 정립은 그동안 서울 중심이었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어 1984년 6월 연대운동체인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결성되고, 재야원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통일국민회의'와의 통합 논의를[8] 거쳐 마침내 각 부문과 지역을 망라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1985년 3월에 결성되기에 이른다.[9]

1985년 2·12총선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선거공간을 통해 표출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당시 민청련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10] 있었으나, 직접적인 참여나 야당에 대한 지지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민정당 낙선운동이라는 전술을 채택했다. 그러나 낙선운동으로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향후 선거투쟁의 방식을 둘러싼 깊이 있는 논의를 과제로 남겼다.

2) 탄압기: 시련을 넘어 (~1987년 6월)

① 시기 개관

민청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을 폭넓게 확산해 나가자 전두환 정권은 위협을 느끼면서 민청련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게 된다.

---

8)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유기홍(1986, 45-46)을 참조.

9) 민통련의 결성에 대해서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를 참조.

10) 당시의 제휴투쟁론과 선주체투쟁론 등 선거투쟁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유기홍(1986, 44-45)을 참조.

1985년 들어 2 · 12총선에서 신생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상당한 진출을 보이고, 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투쟁과 구로지역에서의 노동자 동맹파업이 잇달아 벌어지자 전두환 정권은 소위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여 탄압을 강화하려 했다. 이에 민청련이 중심이 된 '학원안정법 반대 투쟁위원회'가 투쟁을 전개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이 시도가 무산된다. 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민청련을 "학생운동의 배후,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세력, 좌경용공의 온상"으로 몰아 말살시킬 음모를 더욱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1985년 7월에 김병곤 상임위원장의 구속과 이범영 집행위원장의 수배로 이미 민청련 탄압은 예고되었다. 9월에는 김근태 전 의장과 최민화 부의장, 박우섭 운영위원장, 이을호 상임위 부위원장, 연성수 전 상임위 부위원장, 권형택 사회부장, 김희상 대변인, 김종복 사회부장의 구속으로 탄압이 확산되었고, 나머지 전 간부들은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전면화되었다. 이로써 민청련은 공개적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고, 거의 비공개 조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11]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한 살인적 고문 사실이 알려진 것은 구속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였다. 면회가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자행된 10여 차례가 넘는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참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고문에 의해 이을호 상임위 부위원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익환 지도위원 등 원로들이 주축이 되고 각계각층의 민주세력들이 총망라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나중에 6월항쟁을 이끈 '국민운동본부'의 모태가 되었다.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이 두꺼비의 독에 의해 죽고, 그 살은 더 많은 새끼 두꺼비들이 자라날 자양분이 되듯이 전두환 정권은 민청련 탄압으로 인

11) 이때 민청련 사무실을 중심으로 인재근과,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등 구속 및 수배자 가족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모태가 되었다.

해 자신의 명을 재촉했던 것이다.

1986년에 들어서면서 민청련은 제6차 총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헌투쟁에 돌입했다. 사실상 비합법의 활동을 하면서도 5·3인천투쟁에 적극 참여했으며, 1986년 중반에 구속되었던 간부들이 석방되면서 공개 사무실을 회복하는 등 다시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12총선 1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개헌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불붙으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점차 파고를 높여 나갔다. 더구나 1987년 1월 서울대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죽음을 맞으면서, 투쟁의 파고는 전두환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1987년 4월 13일 이른바 호헌조치가 나오면서 개헌투쟁은 범국민적인 투쟁의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5월에는 민통련과 기독교, 가톨릭 등 재야민주세력과 통일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의 구심점이 형성되었다.

② 운동의 방향 설정

이 시기 민족민주운동에게는 거센 탄압에 맞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전국학생연맹과 삼민투에 대한 탄압, 대우자동차·구로동맹파업에 대한 탄압에 이어 몰아닥친 학원안정법 제정 음모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에 대해 민청련을 필두로 민통련·기독교·가톨릭 등 전국의 모든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8월 12일 '학원안정법 반대 투쟁 전국위원회(이하 학반투)'를 결성하여 성명을 발표했으며, 13일에는 학반투와 민추협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홍기일의 분신투쟁, 대한변협과 기독교·가톨릭·대학교수들의 반대성명이 잇달으면서 학원안정법은 일단 철회되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신속한 결집, 중간층의 광범한 반발, 보수야당 세력의 가세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것이었다.

방법을 바꾼 국가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민청련 탄압이 자행되고 잔인

한 고문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투쟁으로 학반투 이후 다시금 모든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집결하게 되었다. 즉 민청련 회원들과 가족들의 농성투쟁, 민통련과 기타 청년·학생 단체들의 규탄성명 등 국내외의 규탄과 투쟁이 확산되어 탄압 음모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수야당까지 포함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민족민주운동 세력 내부에 상당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극악한 탄압에 의해 민청련 등 반합법 공간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구로동맹파업과 서노련 출범 이후 노동운동의 정치투쟁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인천·안양·성남 등 주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운동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족민주운동 세력 내부에서 전면적 재편이 시작되었으나, 노동운동이 아직 전체운동을 지도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과도기적인 운동의 분화와 지도력 공백 등 일시적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분화와 재편은 정치노선상의 새로운 경향, 즉 반외세직접투쟁론이 등장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반외세투쟁이 보다 격화되어 온 일반적인 추세에서 더 나아가, 반외세투쟁을 반독재투쟁보다 더 중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함으로써 각 운동 내부에서 격렬한 사상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 이를 계기로 다양한 변혁운동론이 제기되고, 당면 개헌투쟁의 방향설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편차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화와 재편 및 사상투쟁은 민족민주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각 그룹의 패권적 경향과 결합하여 분파주의적 양상을 낳아 민족민주운동 세력 내부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론의 분화는 개헌투쟁에서도 드러났다. 1986년 초 개헌문제는 민족민주운동의 중심 과제였으며, 개헌투쟁의 방향을 둘러싸고 직선제 개헌론, 민중민주정부 수립투쟁론, 장기집권 저지투쟁론 등 몇 가지 입

장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헌법의 내용보다는 헌법문제 해결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파쇼헌법 철폐투쟁론[12]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모인다.

그러나 개헌투쟁 방법론은 "개헌투쟁 무용론",[13] "삼민헌법 쟁취론", 직선제 개헌론과 변혁과정의 제시에 중심을 둔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투쟁론" 등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 견해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던 민청련은 논쟁을 거치면서 민주제 개헌투쟁론을 천명하고 직선제 개헌을 주요 주장으로 채택했으나, 제6차 총회 과정에서 공식 비판을 받고 철회한다. 제6차 총회 이후에는 기존의 헌법내용에 치중한 방향 설정을 반성하면서 개헌투쟁의 원칙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주요 주장으로 채택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40-241).

③ 실천 활동

이 시기 민청련은 주로 '민주제 개헌 투쟁위원회'와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투쟁위원회'의 양 투쟁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되어 활동을 벌였다.

이를테면, 1985년 12월 6일, 민청련은 E.Y.C., K.S.C.F., 가톨릭청년회, 민중불교운동연합과 함께 2백여 명이 모여 화양동 로터리에서 "파쇼헌법 철폐"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등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갔다. 또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투쟁위원회 주도로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1986. 4. 3)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김근태 전 의장 고문 증언 등 민청련 탄압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공개운동 조직이 탄압에 직면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전투적인 조직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으며, 민청련은 어렵게 이

---

12) 파쇼헌법 철폐투쟁론은 이후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투쟁론으로 발전한다.

13) 개헌은 보수적인 정치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기에 민주화운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중적인 관점에서 개헌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아병적인 발상으로 비판대상이 되고 만다(유기홍 1986, 58).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조직 체계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6차 총회를 앞두고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민청련의 위상과 조직 기반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공개운동이라는 느슨한 조직체계가 아닌 강고한 규율과 헌신을 전제로 한 정예화가 요구되었으며,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전환을 모색했다. 이른바 'AB논쟁'이라고 부르는 사안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민청련을 기존의 선도투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연대 정도로 한 단계 낮추자는 논지와 당시 급격한 발전하는 노동운동 외곽단체로 탈바꿈하거나 민청련을 해체하고 회원들이 노동운동으로 전환, 대중노선의 관철을 구체화하는 '준비론' 논지가 대립된 것이다. 이전 C-N-P논쟁이 민청련 정치노선에 관한 논쟁이었다면, AB논쟁은 민청련의 향후 조직노선에 관한 논쟁이었다. 결국 A의 입장이 다수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이 노동현장으로 이전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제6차 총회 이후 민청련은 탄압 중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 6월 13일 봉천동에서 민불련, 여성평우회 등 청년 단체들과 당시 구체화되고 있던 헌법특위 음모를 폭로하는 가두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부천성고문사건'이 일어나자, 선전활동과 가두투쟁을 계속 전개한다.

그러던 8월 15일에 청년공동투쟁위원회는 각 대학의 '반제 ·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서울대 '반외세자주화 · 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와 연대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헌법특위 분쇄 및 조국통일 촉진을 위한 범국민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투쟁을 했다.

5 · 3인천투쟁으로 인해 민통련을 필두로 운동단체들에 대한 전면 탄압이 잇따르자, 민청련은 1986년 9월에 열린 제7차 총회를 기해 비공개체제로 재정비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고, 민주화운동 세력 대부분이 총 연대하는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어느덧 우리 국민들의 반

독재 의지는 6월항쟁이라는 분출을 준비했다. 그 선두에 민청련이 있었다.

3) 청년운동의 대중화 시기: 대중의 바다 속으로(~1989년)

① 시기 개관

아시안게임 이후 전두환 정권은 개헌투쟁의 물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강경한 탄압공세를 취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건국대 농성투쟁에서 1,300여 명의 구속, 개헌서명 서울대회의 무산, 제헌의회사건 등으로 일시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이때 일어난 박종철 고문살인사건은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다. 박종철의 죽음에 항의하는 2 · 7투쟁과 3 · 3평화대행진을 계기로 다시 투쟁이 불붙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4 · 13호헌조치"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는 개헌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범국민적인 민주화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각계각층의 항의가 잇달았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투쟁은 하나로 모아져 마침내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6 · 10대회는 전국 22개 지역에서 약 3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했다. 대체로 학생과 민주단체가 주도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투쟁양상도 대단히 격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날의 대회가 하루 만의 단발성 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20여 일에 걸친 전국적 항쟁으로 급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 명동성당 농성투쟁이었다. 또한 연세대생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으로 인해 증폭된 국민들의 분노였다. 따라서 6 · 18최루탄추방대회, 6 · 26평화대행진을 거치면서 투쟁의 규모는 점차 커졌고, 이에 전두환 정권은 물리적 제압을 사실상 포기하고 6 · 29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4]

---

14) 6월항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유기홍(2006, 147-171)을 참조.

그러나 6 · 29선언이 군부독재정권의 유지와 재편을 위한 기만적 술수임을 제대로 폭로하지 못함으로써 선거혁명론의 환상이 유포되었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 과도민주정부,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 향후의 투쟁방향과 대통령선거투쟁의 위상을 둘러싸고 민족민주운동 내에서 격심한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국민운동본부의 진로를 둘러싸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탄압의 이완 속에서 7~9월 노동자대투쟁 등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이는 군부독재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범국민항쟁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1987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단일한 대응방침을 모아내는 데 실패하고 세 가지 입장들로 분열되었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단결이 필요하고 따라서 야권의 대통령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후보단일화론"의 입장, 단일화에는 찬성하나 그 대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자는 "비판적 지지론"의 입장,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한 "독자후보론"의 입장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6월항쟁을 주도했던 국민운동본부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의 통일전선조직은 분열했고, 이런 분열상은 각 부문 · 지역에까지 파급되어 나타났다. 결국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했으며, 4파전 구도와 부정선거에 힘입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선거투쟁은 실패로 끝났다. 구로구청투쟁과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 부정선거 규탄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역시 범국민적 투쟁을 되살리지는 못했다. 민족민주운동은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의 분열과 패배를 교훈으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통령선거가 패배로 끝났지만 6월항쟁으로 점화된 대중운동의 불씨

는 바람탄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7~9월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한 노동운동의 급성장 이외에도, 6월항쟁 이후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급속한 진출을 보였다. 농민운동은 1987년 하반기에 수세폐지 · 농지개량조합해체투쟁과 1988년에 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투쟁 및 고추싸움을 통해 조직력을 더욱 확대하여 마침내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빈민운동도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한 철거와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투쟁을 거쳐 1989년 11월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했다. 이외에 학생운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청년운동은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를 결성하여 보다 대중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나갔으며, 기타 여성운동 · 종교운동과 각 지역운동도 대중적 토대를 강화해나갔다.

이 같은 각 부문 · 지역조직의 발전, 투쟁대열의 새로운 정비와 분열의 극복을 바탕으로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건설되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통일전선조직으로, 과거의 어떠한 연합조직보다도 폭넓게 각 부문 · 지역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망라한 것이었다.

이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조국통일운동이 전면화 · 대중화 되었다는 것이다. 4월혁명 이후나 1972년 7 · 4공동성명을 전후한 시기에 통일운동이 이루어졌으나, 그때마다 엄청난 탄압에 부딪쳐 일회적인 운동에 머물렀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더욱 금기시되어왔다.

우선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6 · 10회담과 8 · 15회담이 추진되고 각 사회운동세력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민주운동 세력 전체로 폭을 넓혀나갔다. 이후 통일운동은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다.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과 회담을 했다. 또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투쟁을 전개했다. 이 일환으로 전대협의 임수경 대

표가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급진전을 보였다.

② 운동의 방향 설정

이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선거에 임할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는데 이는 승리이면서도, 개량화의 덫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민족민주운동 진영 내부에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과 "후보 단일화론" 및 "독자후보론"의 세 갈래 흐름이 있었다. "비판적 지지론"은 선거 공간은 대중의 역동성이 발현되는 공간이므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들과 제휴하여 선거투쟁에 참여한다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편집부 1988, 153).

"후보단일화론"은 기본적인 정세인식이나 야당과의 연대론에 있어서는 비판적 지지와 궤를 같이 하지만, '양김'의 분열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김'의 각각에 대한 평가, 운동권의 역량에 대한 평가, 민간정부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평가, 민간정부의 의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다(채만수 1989, 129).

"독자후보론"은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을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과 민중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선전하며, 그에 기초해서 민중의 독자적 · 정치적 조직=정당을 획득해내는 공간으로서 설정하고 있었다(채만수 1989, 129−130). 이 논쟁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문화운동, 종교계 등과 민청련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지역과 부문운동, 재야원로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민통련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는데, 민통련 산하 단체들 가운데 민청련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격론 끝에 민청련이 비판적 지지를 결정하고, 민통련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결의했다.[15] 학생운동도 다수가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다수가 비판적 지지를 통해 대통령선거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후보단일화론은 몇 갈래로 분기되었다. 후보단일화론은 백기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참여전술을 사용하는 등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분열에 빠져 들었다. 또한 대통령선거가 패배로 끝나게 되자, 패배에 대한 책임론까지 더해져 이후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여 단일대오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9년 1월 21일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통일전선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날 발표된 「전민련 결성선언문」에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격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 "노동자 · 농민 등 8개 부문 단체와 전국 12개의 지역 단체로 구성된 전민련은 그동안 혼돈스러웠던 민족민주운동 대열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난날 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근로민중이 운동의 중심이 되고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동력이 되며, 양심적인 교사 · 문인 · 종교인 · 법조인 · 언론인 · 의료인 · 과학인들과 중소상공인 ·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애국적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총결집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민련의 결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당면정세에 대한 해석문제를 비롯하여 대통령선거 평가, 정치노선,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방침과 전술계획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 전민련 결성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주요하게 진행된 쟁점은 전민련의 역사적 지위와 그 역할의 규정문제 등이었다.

---

15) 당시 민통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민족민중운동연구소(1989, 166-170)를 참조.

전민련 지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민련을 상설공투체로 보는 입장, 전민련을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입장, 전민련의 발전 전망을 혁신정당으로 보는 입장 등 세 가지 입장이 존재했다(이재화 1989, 151-152).

민청련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 진영 내부의 다수 입장은 일단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것이었다. 전민련을 상설공투체로 보는 입장은 아직 노동운동의 지도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전민련은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민련의 발전을 혁신정당으로 전망한 입장은 전민련 자체의 조직적 발전보다는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 정도로 보았다. 따라서 전민련 결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출발부터 분화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③ 실천 활동

이 시기 민청련의 활동을 집회투쟁 등 투쟁양식의 변화와 선전활동, 조직운동의 발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쟁 양식과 내용의 변화

이 시기 집회투쟁은 6월항쟁이라는 대중의 바다 속에서 형태상, 내용상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탄압기(반합법 국면이라 해도)에는 투옥이나 수배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진 활동가 중심의 선도적 투쟁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나 노동자 조직과의 대규모 공동투쟁이나 민청련 활동가 중심의 소규모 기습시위 등이 이전 시기 주요 투쟁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6월항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조건 속에서는 소수 선진 활동가들만의 투쟁이 더 이상 대중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이 필요했다. 6월항쟁 과정 속에서 명동성당 농성투쟁과 같은 근거지 투쟁, 사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넥타이부대 시위, 경찰력이 집중되는 도심에서 벗어나 부심으로

집회와 시위를 확산시키는 전술 등이 그것이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대규모 유세와 결합한 여러 투쟁들이 이루어졌다. 민청련 등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유세장이나 유세 이후의 행진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이 아니라 광주학살의 진상, 군부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 등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갔다.

대통령선거 투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1988년 4·26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른바 '여소야대정국'을 만들어 냈다.[16] 이에 따라 민족민주운동이 매우 공세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우선 광주학살과 5공비리 책임자 처벌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민청련은 민통련,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등과 함께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했다.[17] 민청련은 서총련과 함께 '체포결사대' 구성 등 다양한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 투쟁은 마침내 전두환의 백담사행을 이끌어내며 국민적으로 광주학살과 5공비리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는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대중적으로 쟁취하는 경험을 갖게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투쟁전선은 88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요구하는 평화통일투쟁이었다. 민청련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 협의회(이하 조통협)'를 구성하여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해 나갔다.[18] 이후 조통협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남과 북, 해외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마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

---

16) 4.26총선에서 민정당은 125석(득표율 33.96%), 평민당 71석(19.26%), 민주당 59석(23.83%), 공화당 35석(15.59%), 기타 10석으로, 민정당의 완패였다.

17)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발족선언문」, 1988. 10. 15.

18)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 협의회발족선언문」, 1988. 7. 27,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문」, 1988. 7. 27.

해 나간다.[19]

선전활동의 활성화

6월항쟁이라는 대중의 바다 속에서 민청련의 선전활동은 빛을 발했다. 제대로 된 대중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민청련이 발행한 『민주화의 길』과 『민중신문』 등 각종 자료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화의 길』은 발간 초기부터 민족민주운동 세력 내부의 이론지 역할을 담당했는데 6월항쟁 국면과 같이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정세 분석과 운동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운동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했다. 『민중신문』의 역할은 더욱 컸다. 신문 형태의 대중적 정론지를 표방하는 『민중신문』은 각종 집회 현장에서, 선거 유세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읽혔다. 정부의 앵무새격인 방송과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보수신문 등 제도언론에 식상한 대중들에게 『민중신문』은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또한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담은 소책자, 5공비리와 군부정권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소책자 등도 큰 역할을 했다. 유가지(有價紙)로 판매된 이들 소책자는 6월항쟁 당시 엄청난 선전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도 스티커와 벽보, 스프레이 등 기동성 있는 여러 현장 선전매체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조직의 대중화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민청련은 보다 더 폭넓게 대중적으로 활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87년 8월의 제9차 총회를 통해 민청련은 공개 활동의 폭을 대폭 넓히고, 동민청과 남민청, 북민청

---

19) 민청련 등 21개 단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촉구하며」, 1988. 9. 22.

등의 지부를 활발히 건설했다. 6월항쟁은 민청련에게도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를 부여했다. 특히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대중투쟁에 있어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 그래서 민청련의 지부로 노동자 밀집지인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동서울 민청련,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서울 민청련, 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주임무로 하는 북서울 민청련(이후 민주화운동 직장청년연합으로 개편)을 건설했다. 이후 성남 민청련과 안양 민청련, 수원 민청련까지 결성하여 민청련은 지역 지부를 통한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또한 부설 교육기관으로 청년학교를 설립하여 대중교육 사업을 실시했는데, 청년학교의 대중교육 사업은 이후 다른 많은 청년단체와 대중단체들이 ‘ㅇㅇ학교’라는 명칭으로 교육사업을 조직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

4) 전국 청년 단일조직 건설과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1992년 11월)

① 시기 개관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위로부터의 정계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 보수여당인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이 탄생했다. 3당합당의 요인으로는 당시의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보수정당이라는 이념적 동질성,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엘리트정당,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당권 등의 구조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3당합당으로 민자당은 국회에서 개헌선인 ⅔를 넘는 218석을 확보하고, 지역에 기반한 4당 구조를 보수 대 혁신의 양당구조로 바꾸

어 놓았다.[20]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이를 "3당 야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로 단결하는 "민주대연합"을 기치로 내걸고 반민자당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3당 야합의 근저에 내각제개헌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내각제개헌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9, 10-36).

1989년 5월 광주에서 조선대 이철규가 의문사의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1991년 5월에는 명지대 강경대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의해 타살되자 폭력정권 규탄과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이 전국적에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성균관대 김귀정이 죽음을 당하자 노동자 · 청년 · 학생 · 교사 등 모든 부문의 대중투쟁이 이어졌다.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 · 부산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투쟁은 6월항쟁에 못지않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도 통일운동은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전격적인 방북 이후, 통일문제는 더욱 대중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으로 인해 반공 이데올로기의 일각에 금이 가고 통일운동의 공간이 마련된 측면도 있었다.

1989년 제안된 범민족대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이 구체화되었으나(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91a, 55-64; 1991b, 65-70), 1990년 판문점 범민족대회는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매년 범민족대회가 추진되었다. 이후 통일운동은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여망

---

20) 초기에 민자당은 민주 · 번영 · 통일을 이념으로 내걸고, 총재 1인(노태우)과 대표위원 3인(김영삼 · 김종필 · 박태준)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했다. 그러나 계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 및 당직배분으로 당내 갈등이 지속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과[21] 함께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 더욱 폭넓게 확산되었다.

② 청년운동의 전국적 발전

6월항쟁을 거치며 전국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6월항쟁 이전의 청년단체는 민청련과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등에 불과했으나, 1987년과 1988년에 경과하면서 서울의 '나라사랑청년회' 등 다수의 청년단체가 만들어져 청년운동의 전국적 단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1989년 1월의 전민련 결성에 맞춰 전국 20여 개의 청년단체가 모여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를 결성한[22]것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민청련은 청년학교 등 대중강좌의 개최, 문화소모임 방식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안양, 성남, 수원 등에 지부 조직을 건설하면서 전국 청년 단결사업의 구심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전청대협은 비록 대표자협의회의 수준이지만 전국적 규모의 통일운동에의 참여와 전국 간부수련회 등을 거치면서 "전국 청년 단일조직의 건설"에 합의하는 등 점차 단결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또한, 전민련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떠맡아 나갔다.

---

21) 1989년 방북한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50년 '희년'의 여망이 겹치면서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22) 초기에 참가한 단체는 나라사랑청년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인천민주청년회, 수원사랑민주청년회, 경기동부지역청년회, 성남청년회, 원주민주청년회, 강릉명주민주청년회, 속초 · 양양 · 고성지역사랑민주청년회, 부산민주청년회, 진주민주청년회, 대구새로운청년회, 마산창원민주청년회, 김해민주청년회,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목포참세상청년회 등이다. 그리고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한물결청년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등이 참관단체로 함께 했다.

6월항쟁 이후의 시기가 각 시 · 군 · 구 단위로 청년단체 결성이 확산되는 시기였다면, 전청대협 결성 이후는 각 시 · 도별 청년단체협의회가 건설되면서 지역 청년운동의 단결력과 대중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3월에 '영남지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영청대협)'가 결성되었다. 영청대협은 전청대협의 지역 조직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 · 울산 · 마산 · 창원 · 김해 · 진주 · 부산 등 청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되어 의미가 깊었다. 1991년 2월에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가 창립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경기남부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직사업이 확대되었다.

1991년 후반에 들어 전국 청년 단일조직으로서 한청협을 건설하려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한청협 준비위원회가 한청협을 한국 청년들의 단일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설정한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23)]

전청대협에서 한청협으로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었다. 첫째, 전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대중조직운동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청년단체는 과거의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의 시 · 군 단위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1990년 광주순례, 1990년과 1991년의 범민족대회 등 전국 집결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소속 회원들의 연대의식과 정치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전청대협은 이를 담아내기 어려운 여러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당시의 객관적인 정치상황이 새로운 전국적 청년운동체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었다. 1992년은 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겨울의 대통령 선

---

23) "㉠사상의지적 통일수준과 규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각 단체의 조직 활동상의 써클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소속단체에 통일적인 조직 활동의 정형을 세운다. ㉢각계각층 청년 대중에 대한 조직사업체계와 정책을 세워야 한다"(유기홍 엮음 2000, 32-33).

거 등 주요 정치일정이 많은 해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전국 차원의 대중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약 반년간의 준비를 통해 1992년 2월 23일에 30개의 단체가 참가하고 12개의 단체가 참관하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를 결성했다(유기홍 엮음 2000, 34).

전청대협에서 한청협으로의 발전은 조직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동반했다. 첫째, 중앙 역량의 강화이다. 과거 중앙의 간부는 의장을 포함하여 모두가 소속단체의 직책을 겸임했기 때문에 전국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양적으로도 전국조직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한청협이 결성되면서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역량이 강화되어 일상적으로 전국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둘째, 전청대협은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조직이었으나, 한청협은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국의 청년단체의 회원이 한청협의 회원이 되는 구조로 조직의 결속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한청협은 이렇게 전국 청년 단일조직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었다.

③ 1992년 11월: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

서청협 결성 이후 "전국청년 단일조직"건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결과제인 지역청년 단일조직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광주와 목포 · 대전 등에서 지역 청년단체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청년단체가 되면서(유기홍 엮음 2000, 57-71), 민청련도 전국 청년운동을 이끌어 가는 청년단체로서, 한 개별단체로서의 독자적 성장보다도 서울지역과 전국의 청년단체를 궁극적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맞게 된 것이다.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광주지역위원회'와 '빛고을 새날청년회'가 통합하여 '광주민주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전남민주

주의청년연합 목포지역위원회'와 '목포 참세상청년회'는 '목포민주청년회'로 통합했고,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과 '대전새날청년회'가 통합하여 '대전민주청년회'가 결성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에 광주와 목포 및 대전 등지에서 창립된 선도적 청년단체와 6월항쟁 이후 새로이 출발한 대중적 청년단체들이 통합하여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민청련 중앙본부도[24] 하나의 개별단체로 남기보다는, 민청련 중앙의 지도력은 전국(혹은 서울 지역) 청년 단일조직의 지도력으로 이전하고, 각 지부 조직은 지역 청년 단일조직이나 전국 청년 단일조직에 각각 개별단체로 참여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가 제14차 총회의 쟁점으로 등장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게 되었다. 1992년 1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선배들까지 포함하여 민청련의 진로를 결정하는 논의는 견해 차이가 드러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전국 청년 단일조직 건설과 서울지역 단일조직 건설을 위해 민청련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서청협과 한청협을 강화하자"는 후배들의 입장과 "전국 청년의 단결을 꾀해 나가면서도 개별단체로서의 민청련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청련에 대한 선·후배 모두의 애정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남았다. 어찌되었건 1980년대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그리하여 민족민주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민청련을 해소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내 1992년 11월 민청련 제1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민청련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민청련의 지부 조직들은 서청협과 한청협에 가입하여

24) 당시 민청련은 동서울민청련과 남서울민청련, 안양민청련, 성남민청련, 수원민청련, 민주직장청년회 등 지부·조직들이 사실상 하나의 개별단체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민청련 중앙은 전국 청년 연대사업과 대외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지역과 전국 청년단일 조직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채택함으로써 민청련은 발전적 해소를 결의했다. 민청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청협과 각 지역 청년단체의 대중적 발전 속에 살아남아 다시금 199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격랑을 헤쳐 나가게 된다.

5. 맺음말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의 좌절을 딛고,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새로운 전열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 민청련은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① 변혁운동으로서의 총체성 획득, ② 기층대중운동의 성장, ③ 통일전선운동의 진전, ④ 투쟁 형태상의 발전이라는 네 가지 점에서 이전의 운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민청련은 각각의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청련은 이미 창립 초기의 활동 목표로 ① 투쟁성의 회복, ②청년 내부역량의 체계화, ③ 다른 운동세력과의 굳건한 연대, ④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 ⑤ 운동 방향의 모색과 방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1980년대의 시대정신과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발전방향을 앞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3년 9월 이후 창립기의 민청련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돌파하여 이른바 반합법 투쟁 공간을 확보하여 각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 이에 군부정권은 공안탄압으로 대응했는데, 그 첫 표적이 바로 민청련이었다. 김근태 전 의장 등 주요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에도 불구하고 민청련은 개헌투쟁을 수행하며 대중투쟁의 분출을 예비하고 있었다.

6월항쟁이라는 대중의 바다 속에서 민청련은 더욱 단련되고 새롭게 태어났다. 지부 건설을 통해 노동자 등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활동의 근

거지를 만들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솟아나는 청년역량을 결집하여 "전국 청년 단일조직"건설에 매진해 나갔다. 1992년 11월 전국 청년 단일조직의 대의를 위해 개별단체로서의 민청련을 발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약 10년에[25] 걸친 민청련은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민청련의 정신과 실천은 민청련을 계승한 한청협과 전국 청년단체 속에 살아남아 다시금 역사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게 된다.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성장과 전국 청년 단일조직의 건설 이외에도 우리는 민청련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민청련이 낳은 많은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사회운동과 각계 대중운동, 그리고 정당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6] 이는 향후 우리 지성사의 한 장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민청련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혁운동론과 조직론 등에 대한 논쟁들은 이후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전략전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식틀을 제공했다. 『민주화의 길』이나 『민중신문』 등 선전매체, 청년학교 등 대중강좌사업과 더불어 민주집중제에 입각한 내부 민주주의의 전통은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운동과 대중운동에 있어 소중한 모범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청련 활동 과정에서 스러져 간 많은 이들의 정신이 여전히 민청련의 역사 속에 온전히 남아 있다. 문익환(지도위원), 김병곤(상임위위원장), 이범영(의장), 김기설(성남민청련 회원), 윤용하(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회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헌신성이야말로 우리가 살았던 저 '질풍노도의 시대'에 가장 소중한 덕목이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민청련 10년의 빛나는 성과가 있다면, 그를 위한 헌사는 바로 이들에게 바쳐져

---

25) 1982년부터 민청련의 창립 준비가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10년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해찬(전 국무총리) 등 정치지도자 외에도 노동조합, 전교조, 시민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등에서 민청련 출신자들의 활약은 매우 두드러진다.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민중운동연구소. 1989.『민통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6월항쟁을 기록하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민주화의 길』 창간호.

_____. 1989. "특집 대토론: 민주대연합과 내각제개헌 저지투쟁의 방향."『민주화의 길』 제27호.

_____. 1991a. "자료: 91년 범민족대회와 범민련의 진로."『민주화의 길』 제31호.

_____. 1991b."기획: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91년 통일운동의 방향."『민주화의 길』 제31호.

유기홍 엮음. 2000.『한청협 10년사』. 한청협 전국동지회.

유기홍. 1986.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반성."『민주화의 길』 제15호.

_____. 1994.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한국사』 20. 한길사.

_____. 2006. "6월항쟁, 그 아름다운 대하드라마."『교육에서 희망찾기』. 푸른나무.

이재화. 1989. "통일전선론-어떻게 민중이 독재정권을 포위할 것인가?"『80년대 사회운동논쟁: 월간 사회와 사상 창간 1주년 기념 전권특별기획』. 한길사.

_____. 1989. "통일전선론-어떻게 민중이 독재정권을 포위할 것인가?"『80년대 사회운동논쟁: 월간 사회와 사상 창간 1주년 기념 전권특별기획』. 한길사.

채만수. 1989. "선거전술론-필연적으로 예비되었던 분열이 현실화되었던 논쟁."

『80년대 사회운동논쟁: 월간 사회와 사상 창간 1주년 기념 전권특별기획』. 한길사.
편집부. 1988.『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투고: 2010.10.30